

#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협력의 한계와 과제

## 충북에서 무엇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광진의 사회연대경제 전환 경험에서

박용수(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2026. 10.

### I. 들어가며

#### 1. 문제제기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을 거치며 빠르게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법과 예산이 생기자 조직의 수가 늘었다. 그러나 조직이 늘어난 만큼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힘도 커졌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2018년 말 기준 설립된 협동조합 14,526개 가운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54.2%였다(기획재정부, 2020). 인증과 지정, 인건비 지원으로 짜인 정책은 조직을 빨리 늘렸지만, 그 조직들이 스스로 서고, 서로 이어지는 힘을 기르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같은 시기 시민사회는 다른 길을 걸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권력 감시, 정책 제안,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부처별 기업 지원 체계 안에서 성장하였다. 두 영역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주민을 만나면서도 서로 다른 법, 다른 부처, 다른 평가 언어 속에서 일해 왔다. 돌봄, 먹거리, 주거, 에너지 문제가 커질수록 이 분리는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민사회는 문제를 공론화하지만 해법을 오래 지탱할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사회적경제는 해법을 사업으로 만들지만 그 사업이 왜 공공의 일인지 설득할 언어가 약하다.

2026년 8월 20일, 2014년 처음 발의된 뒤 세 번의 국회 임기 만료를 넘긴 법안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서울신문, 2026).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를 채택하고(ILO, 2022), 유엔 총회가 2023년 사회연대경제 촉진 결의를 채택한 흐름(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23)이 한국의 법률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 개념이 지역에서 무엇을 바꾸는가이다.

#### 2. 발제의 목적과 구성

이 발제는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왜 어려웠는지를 짚고, 서울 광진에서 시작한 사회연대경제 전환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에서 무엇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자료는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광사넷)의 「광진사회연대경제(GSSE) 2026~2036 대전환 전략 실행 로드맵」(박용수, 2026), 광사넷 소개자료와 통합돌봄 협력사업 기록, 그리고 로베르 부아예(Robert Boyer)의 『사회연대경제: 21세기를 위한 현실적 유토피아?』(Boyer, 2023/2025)를 중심으로 하였다. 발표자는 광사넷 이사장으로서 로드맵 설계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래서 이 글은 참여자의 위치에서 수행한 내부 성찰의 성격을 지니며,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계획은 성과가 아닌 '가설의 구상이자 전략 방향'으로 다룬다.

II장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묻는 것을 정리하고, III장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가 따로 걸어 온 이유를 살핀다. IV장에서는 광진의 전환 전략과 그 안의 풀리지 않은 물음을 다루고, V장에서 충북을 위한 제언을 드린다.

## II. 사회연대경제는 무엇을 다시 묻는가

### 1.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처럼 법적 형태를 기준으로 영역을 묶는 말이다. 연대경제는 1980년대 이후 프랑스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실업자, 이주민, 여성, 빈민이 스스로 만든 근린 서비스와 공정무역, 연대금융, 지역화폐 실천에서 나왔다. 연대경제는 경제 활동이 어떤 원리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공적 공간에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는지를 묻는다(Laville, 2010). 사회연대경제는 제도화된 조직의 경제적 무게와 연대경제의 운동성을 함께 담으려는 이름이다.

ILO의 정의도 이 흐름을 따른다. ILO는 사회연대경제를 "집단적 이익 또는 일반 이익에 봉사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조직, 기타 실체"로 규정하고, 자발적 협력과 상호부조, 민주적·참여적 거버넌스, 자율성과 독립성,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앞세우는 원칙을 들었다(ILO, 2022). 조직의 이름보다 활동의 목적과 운영 원리를 먼저 묻는 정의다. 퀘벡에서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운동, 협동조합, 여성운동이 함께 사회적경제를 공동 의제로 삼아 보육과 재가 돌봄, 사회금융 제도를 만든 경험(Mendell, 2009)은,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 운동과 결합할 때 제도의 모양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2. 경제와 정치를 함께 보는 눈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루이 라빌(Laville, 2016)은 연대경제를 (사회)정치적 차원과 (사회)경제적 차원이 맞물린 현상으로 본다. 정치적 차원은 공적 공간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고 집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다. 경제적 차원은 평등한 호혜에 바탕을 둔 연대, 그리고 여러 경제 원리의 혼합이다. 두 차원이 맞물려 움직일 때 제도가 바뀐다.

여러 경제 원리의 혼합이라는 생각은 칼 폴라니(Polanyi, 1944/2009)에 이론적 기원을 둔다. 폴라니는 인간의 경제가 시장 교환만으로 움직여 온 적이 없으며, 재분배와

호혜가 함께 경제를 엮어 왔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장이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를 조정하려 할 때 사회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일으킨다고 분석하였다. 사회연대경제는 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경제를 지역의 관계 속에 다시 놓으려는, 곧 재배태(re-embedding)의 실천이다.

<표 1>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와 지역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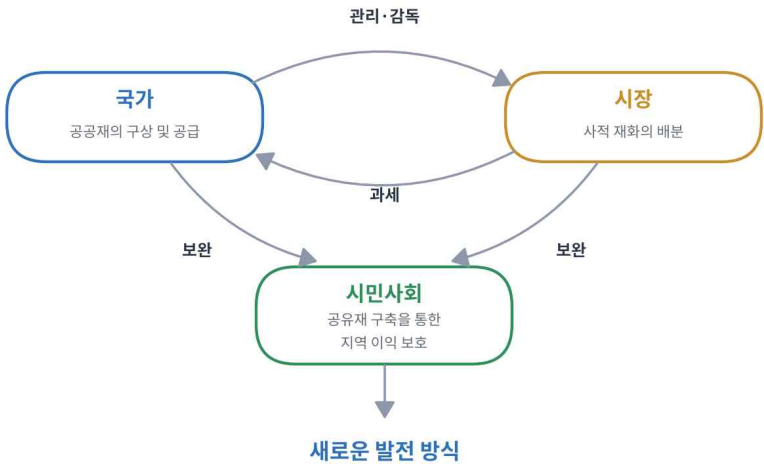
| 원리    | 내용                 | 지역의 예                    |
|-------|--------------------|--------------------------|
| 시장 교환 | 가격을 매개로 한 사고팔      |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 회원사 간 상호거래 |
| 재분배   | 공공이 거두어 다시 나누는 것   | 보조금, 공공 위탁, 사회서비스 바우처    |
| 호혜    | 대가를 바로 셈하지 않는 주고받음 | 자원활동, 기부, 타임뱅크, 이웃 돌봄    |

자료: Polanyi(1944/2009), Laville(2016)을 바탕으로 발표자 정리.

이 관점에서 보면 보조금은 사회가 합의한 재분배의 한 형식이고, 자원활동은 호혜라는 독자적인 경제 원리의 표현이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사회단체가 만나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 수입은 사회적경제가, 호혜의 동원은 시민사회가 더 익숙하다. 둘이 함께 있어야 경제를 다시 사회 속에 놓을 수 있다.

### 3. 국가·시장·시민사회 사이의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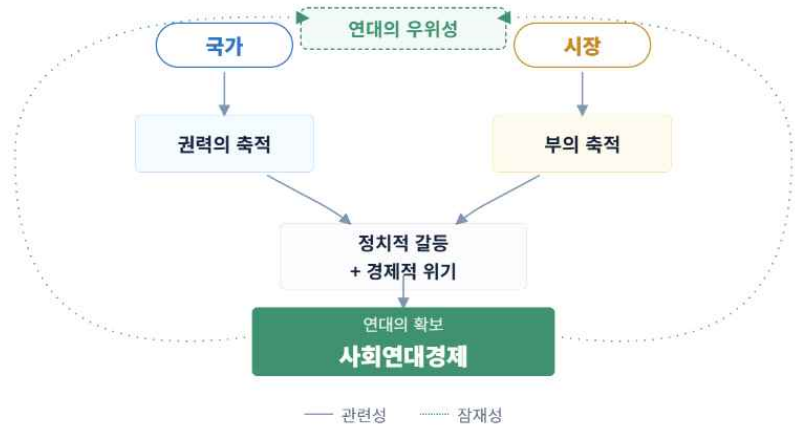
조절이론의 대표 연구자인 부아에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시장이 작동하려면 국가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고, 국가의 공공재는 민간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지역 상황에 가장 가까운 상호 지원과 재분배를 수행한다. "중앙정부는 지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순수한 시장관계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Boyer, 2023/2025: 29). 세 영역 사이에 시너지가 있을 때 다양한 발전 전략이 등장하고 자랄 수 있다.



<그림 1> 국가, 시장, 시민사회

자료: Boyer(2023/2025: 29)의 <그림 2>를 발표자가 다시 그림.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는 권력을, 시장은 부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는 권력으로 시민사회를 관리하려 하고, 시장은 부로 정치를 포획하려 한다. 두 축적이 겹칠 때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가 생긴다. 부아에는 이때 사회연대경제가 연대를 확보하는 자리로서 '연대의 우위성(primauté de la solidarité)'을 내세운다고 본다. 이윤의 극대화나 권력의 집중보다 사람 사이의 연대와 호혜를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그림 2> 사회연대경제의 도전: 권력과 부의 역학에 맞서기**  
 자료: Boyer(2023/2025: 56)의 <그림 9>를 발표자가 다시 그림.

부아에는 낙관만 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연대경제의 미덕으로 회귀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기존 위계의 전복은 나타나지 않았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쓴다(Boyer, 2023/2025: 56). 그리고 사회적 혁신이 경제주체의 일상적 판단을 이끌고 국가가 규칙을 바꿀 때 근거로 삼을 이론적 틀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를 묻는다. 이는 정당화의 결손이라 할 수 있다.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이 결손은 오히려 더 뚜렷해진다. 법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시민과 지방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는 지역의 실천 속에서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Ⅲ. 왜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는 따로 걸어 왔나

사회연대경제가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를 같은 뿌리에서 본다면, 현실의 두 영역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이유를 제도, 언어, 자원, 정당화의 순서로 살펴본다.

**<표 2>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가 따로 걸어 온 구조**

| 구분    | 사회적경제                     | 시민사회                      |
|-------|---------------------------|---------------------------|
| 근거 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개별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정부 공익활동 조례 |
| 지원 체계 | 부처별 기업 지원(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익활동지원센터      |

| 구분        | 사회적경제              | 시민사회              |
|-----------|--------------------|-------------------|
|           | 안전부·보건복지부)         |                   |
| 자기 설명의 언어 | 매출, 고용, 인증         | 권리, 감시, 공익        |
| 성과 평가     | 고용 인원, 매출, 서비스 제공량 | 사업 실적, 캠페인과 정책 제안 |
| 부족한 것     | 공공성을 설득할 정치적 언어    | 해법을 지탱할 경제적 기반    |

자료: 발표자 정리.

## 1. 서로 다른 법과 부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체계와 지방정부의 공익활동 지원 조직을 통해 자원을 얻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두 영역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상설 구조는 드물었다. 중간지원 조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시민사회(공익활동)지원센터로 나뉘어 있다.

## 2. 서로 다른 언어와 평가

사회적경제는 매출, 고용, 인증의 언어로, 시민사회는 권리, 감시, 공익의 언어로 자신을 설명해 왔다. 이 차이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낳는다.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를 '시장에 포섭된 기업'으로,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를 '사업을 모르는 운동'으로 보기 쉽다. 라빌의 눈으로 보면 이 오해는 같은 현상의 경제적 면과 정치적 면을 각자 붙잡고 있는 데서 생긴다.

## 3.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

지방정부의 예산과 민간 기부는 한정되어 있다. 협력이 자원 배분의 문제로만 다루어지면 협력은 곧 경쟁이 된다. 광진의 통합돌봄 협력사업도 공모사업의 3년 주기에 맞추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했고,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간사 조직은 회의와 정산에 지쳐 갔다. 연대에는 비용이 들며, 그 비용을 누가 질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협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 4. 함께 말할 정당화의 언어가 없다

두 영역 모두 자신이 왜 공공의 일을 하는지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부아예가 말한 정당화의 결손은 시민사회에도 그대로 해당한다. 그래서 두 영역이 먼저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은 공동 사업보다 공동의 정당화 논리다. 무엇이 지역에 필요한 경제인지, 공공 재원은 어떤 원칙으로 써야 하는지, 성과는 어떤 언어로 말할지를 함께 정하는 일이다.

# IV. 광진의 실험: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 1. 광사넷이 걸어 온 길

광사넷은 광진구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시민사회단체, 마을넷이 함께 모여 2015년 6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였다(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3). 설립 때부터 시민사회단체가 회원으로 함께하였고, 돌봄·교육·주거복지·유통·먹거리 분과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회원사 간 상호거래는 2015년 65건, 2,300만 원에서 2022년 1,226건, 약 4억 1천만 원으로 늘었다(이은주, 2023). 돌봄분과는 2016년 돌봄클러스터에서 출발하여 돌봄SOS 서비스 플랫폼, 먹거리 돌봄 '다정밥상'으로 이어지는 통합돌봄 협력사업을 10년 가까이 이어왔다.

이 경험은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사회단체가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만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 주었다. 동시에 사업 단위의 협력만으로는 공모사업의 일몰과 행정의 칸막이를 넘기 어렵다는 것도 알려 주었다. 2026년 1월의 전환 선언은 이 경험에서 나왔다.

## 2. 전환 선언과 다섯 전략

광사넷은 2026년 1월 '실천 전략'으로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10년 로드맵을 세웠다(박용수, 2026). 개별 조직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던 활동을, 지역 단위에서 경제를 사회적 관계 속에 다시 배태하는 운동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로드맵은 고정된 청사진이 아니라 구성원의 학습과 대화를 통해 고쳐 나가는 전략을 지향하며, 그 근거를 성찰과 행동의 통일이라는 프레이리(Freire, 1970)의 프락시스에서 찾는다.

<표 3> GSSE 2026~2036 로드맵의 전략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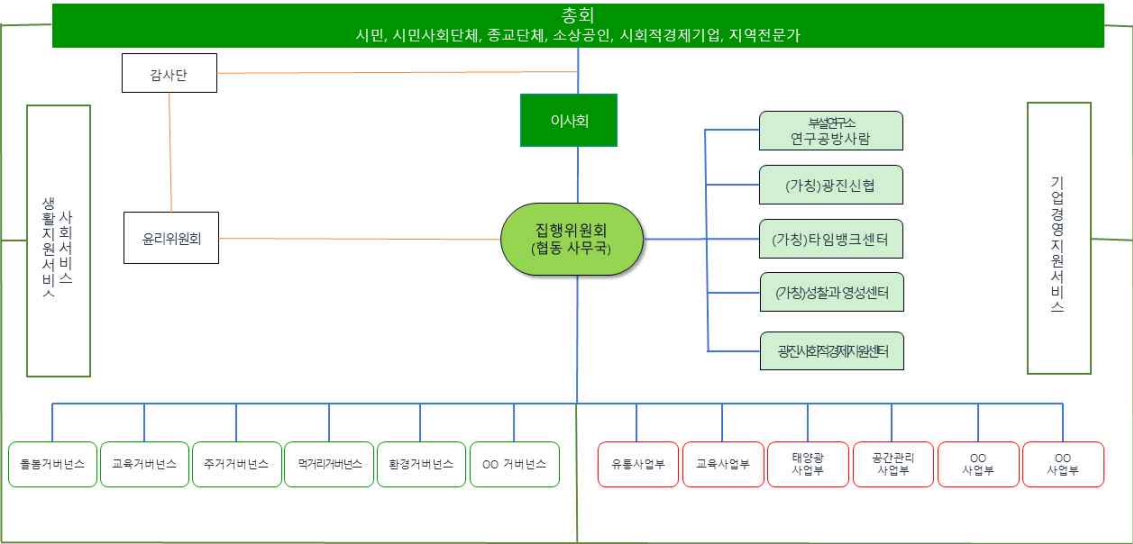
| 전략             | 주요 과제                                                  | 경제 원리             |
|----------------|--------------------------------------------------------|-------------------|
| 지역연대경제망 구축     | 시민 회원 일만 명 조직, 생산자 인큐베이팅, 먹거리 순환 체계, 의료사협과 상호돌봄, 재생에너지 | 시장 교환(회원제), 호혜    |
| 지역 공유자산 축적     | (가칭)광진신탁 설립, 시민자산화(공동체 주택·사업장 공동매입), 공유자산 개발           | 호혜(기금·공제), 시장(금융) |
| 시민 주도 민주적 거버넌스 | 사회연대경제·협치·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민·민 및 민·관 거버넌스, 시민주권 강화       | 재분배, 정치적 참여       |
| 일만 시민의 성장 생태계  | 광드라곤 아카데미, 북살롱, 광진사회연대경제 포럼, 성찰과 영성 프로그램               | 호혜(학습 공동체)        |
| 관계 생태계         | 타임뱅크와 (가칭)타임뱅크센터, 지역화폐 인센티브                            | 호혜, 시장(지역화폐)      |

자료: 박용수(2026)를 발표자가 요약.

경제 원리로 보면 로드맵은 시장 교환 위에 호혜와 재분배를 겹쳐 놓는다. 시민 회원의 구매를 조직하고 그 필요에 맞는 생산자를 키우는 일은 시장 교환이지만, 그 교환이 익명의 시장이 아닌 회원 관계 속에서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협동기금과 공제부금으로 신탁 설립의 기반을 쌓는 일은 지역의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공유자산 전략이다. 타임뱅크는 화폐를 거치지 않는 호혜를 제도로 만든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조례 제·개정, 민관 거버넌스, 시민주권 강화를 하나의 전략으로 세웠다. 사회적경제가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을 공적 공간의 의제와 연결하려는 것이다.

### 3.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를 한 테이블에

조직 구상에서는 총회의 구성원으로 시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전문가를 함께 두었다. 그 아래 돌봄·교육·주거·먹거리·환경 등의 제별 거버넌스와 유통·교육·태양광·공간관리 등 사업부를 나란히 배치하였다. 의제를 다루는 쪽과 사업을 하는 쪽이 한 구조 안에서 만나도록 한 것이다. 광진에서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협력은 이 구조 안에서 시험받게 된다.



<그림 3> 광진사회연대경제(GSSE) 조직 구상도

자료: 박용수(2026).

### 4. 아직 풀리지 않은 물음

로드맵에는 아직 해명되지 않은 과제도 있다. 로드맵 전체를 꿰는 '일만 명 시민'이라는 목표는 강한 상징이지만, 그 숫자가 광진의 인구와 가구 구조, 지금의 회원 규모, 지역 내 구매력에 비추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근거를 갖추지 못한 목표는 실행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성과지표의 대부분이 회원 수, 거래량, 설립 여부, 참여자 수 같은 양적 지표라는 점도

다시 볼 대목이다. 측정은 쉽지만, 성과가 숫자로만 켜지면서 운동성이 약해진 한국 사회적경제의 경험을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로드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재증가율'은 아직 측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 신뢰와 호혜의 밀도를 보여 줄 질적 기록, 예컨대 관계망 분석이나 참여자의 이야기를 함께 남기는 방식이 필요하다.

공공 자원과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 로드맵은 금융과 자산의 지역화로 외부 의존을 줄이려 하면서도 민관 협력 예산의 확대를 성과로 삼는다. 다원적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조합이지만, 공공 재원을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에 대한 원칙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통합돌봄에서 공모사업의 일몰을 여러 번 겪은 광진이라면, 이 원칙은 먼저 세워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로드맵은 설계자의 문서다. 그 철학이 구성원 사이에서 얼마나 공유되는지는 구성원들의 속의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 V. 충북에서 무엇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충북에서는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재단이 충북사회연대경제 대협약을 계기로 한자리에 섰다. 대협약은 두 영역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는 상징이다. 앞에서 본 한계를 넘으려면 협약을 이행할 구조가 뒤따라야 한다. 광진의 경험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광진이 비용을 치르며 배운 것을 충북의 조건에 맞게 다시 묻자는 뜻에서 다음을 제안한다.

### 1. 대협약을 이행할 공동 테이블

협약을 맺은 세 주체가 함께 의제를 정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상설 테이블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모든 의제를 다루기보다, 돌봄, 먹거리, 에너지처럼 두 영역이 이미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의제를 골라 공동 의제 테이블을 먼저 꾸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테이블이 충청북도와 시·군의 협의 창구가 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사업을 나누기 전에 정당화의 언어를 함께 만드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 2. 도농을 잇는 지역연대경제망

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과 여러 중소 농촌 지역이 함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이 구조는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를 잇는 먹거리 순환에 유리하다. 광진의 지역연대경제망이 한 자치구 안에서 생산과 소비를 잇는 데 머문다면, 충북에서는 시·군 사이의 도농 연계망으로 넓힐 수 있다. 청주의 시민 회원 조직과 농촌의 생산자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잇는 회원제 구매 조직은 시민사회의 조직력과 사회적경제의 사업 역량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모델이다.

### 3. 지역 공유자산과 사회연대금융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투자, 융자, 보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하였다(서울신문, 2026). 사회적 금융 기반이 약했던 지역에는 기회다. 광진이 그린 협동기금, 신탁, 시민자산화의 흐름은 충북에서 지역재단의 모금 역량과

사회적기업협의회의 사업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이 공유자산으로 쓰이려면 기금의 운용 원칙과 의사결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장치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 4. 활동가 공동학습의 장

연대의 지식은 저절로 쌓이지 않는다. 비영리 활동가, 사회적경제 종사자, 주민이 함께 배우는 학습 공동체는 두 영역의 언어 차이를 좁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시민사회 활동가가 사회적경제의 경영을 배우고, 사회적경제 종사자가 공론화와 정책 제안을 배우는 교차 학습에서 시작할 수 있다. 활동가의 활동 환경 개선과 건강한 일자리 논의와 연결하여, 학습이 활동가의 경력 경로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 5. 기본법 시행에 맞춘 충북의 제도 정비

기본법 시행은 지역 제도를 다시 정비할 계기다. 충청북도와 시·군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원칙에 맞게 고치고, 국가 기본계획과 이어지는 지역 기본계획을 세우되 그 과정에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때 조례는 지원의 근거를 넘어 지역의 공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 무엇을 사회연대경제로 볼지, 공공 재원을 어떤 원칙으로 쓸지, 성과를 어떤 언어로 평가할지를 시민이 함께 정하는 과정 자체가 정당화의 과정이다.

<표 4> 충북을 위한 제언과 실행안

| 제언               | 실행안                                      | 주체                 |
|------------------|------------------------------------------|--------------------|
| 대협약을 이행할 공동 테이블  | 돌봄·먹거리·에너지 등 공동 의제 테이블, 도·시·군과의 협의 창구    | 협약 주체              |
| 도농을 잇는 지역연대경제망   | 청주 시민 회원 조직과 농촌 생산자 협동조합·자활기업을 잇는 회원제 구매 | 사회적기업협의회, 시민사회     |
| 공유자산과 사회연대금융     | 지역재단 모금과 사회적 금융의 결합, 기금 운용에 시민사회 참여      | 충북시민재단, 사회적기업협의회   |
| 활동가 공동학습의 장      | 활동가·종사자·주민 교차 학습, 활동가 경력 경로와 연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중간지원조직 |
| 기본법 시행에 맞춘 제도 정비 | 조례 개정, 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민 참여형 수립 과정          | 충청북도, 시·군, 의회      |

자료: 발표자 정리.

## VI. 맺으며

부아에는 사회연대경제를 '21세기를 위한 현실적 유토피아'라고 불렀다. 유토피아는 현실을 부정하는 꿈이 아니라, 현실의 조건 속에서 더 나은 세계를 향해 쌓아 가는 구체적인 실험이다. 광진에서 시작된 전환도, 충북에서 맺어진 협약도 그 실험의 한 자리다.

오늘 토론을 위해 질문을 남긴다. 충북의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가 함께 풀 첫 의제는

무엇인가. 협력에 드는 비용, 곧 간사 조직과 회의와 학습의 비용은 누가 어떻게 나누어 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왜 공공의 일인지를 시민에게 어떤 언어로 말할 것인가. 이 질문에 함께 답해 가는 과정이 곧 충북의 사회연대경제가 될 것이다.

상상은 현실이 된다.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능하다.

## 참고문헌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2023). 「광진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이야기」(광사넷 소개자료).
- 기획재정부(2020).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 박용수(2026).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 지속 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실천 전략, 광진사회연대경제(GSSE) 2026~2036 대전환 전략 실행 로드맵」.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서울신문(2026. 8. 21.). 4495일 표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12년 '입법 릴레이' 끝낸 복기왕.
- 이은주(2023). 「협력작동방식: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Boyer, R.(2023).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Une utopie réaliste pour le XXI<sup>e</sup> siècle? Paris: Les Petits Matins. 박충렬·안정현 옮김(2025). 『사회연대경제: 21세기를 위한 현실적 유토피아?』. 경인문화사.
- Freire, P.(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Herder and Herder.
- ILO(2022). Resolution concerning 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110th Session.
- Laville, J.-L.(2010). Politique de l'association. Paris: Seuil.
- Laville, J.-L.(2016).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Pratiques, théories, débats. Paris: Seuil.
- Mendell, M.(2009). The three pillars of the social economy: The Quebec experience. In A. Amin(Ed.), The Social Economy. London: Zed Books.
- Polanyi, K.(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홍기빈 옮김(2009). 『거대한 전환』. 길.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23).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A/RES/77/281).